

보이스피싱·스팸문자 연내 전면 차단

■ 개인정보 보호법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2차 피해 막자”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요건 강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금융사 예외 조항’ 논란 예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와 정보 공유 시 고객 통지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할 만 점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권이 내달 초부터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다.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도 강화해 스팸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위반

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과 함께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논란거리다.

법 시행 후 금융사들이 겪을 업무 불편과 막대한 시스템 변경 비용을 이유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틀 박정부, 새로짜야”

노무현 재단 주장

노무현 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7일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운용의 근본적인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날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을 맞아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도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언제쯤 ...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한 27일 중국 대안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접수처에서 전낙린 할아버지(78·평남 대동군)가 자신의 신청서 접수를 확인하고 있다. 전 할아버지는 이번엔 상봉이 성사되도록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추석 당시 진행하려다 무산된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한 27일 중국 대안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접수처에서 전낙린 할아버지(78·평남 대동군)가 자신의 신청서 접수를 확인하고 있다. 전 할아버지는 이번엔 상봉이 성사되도록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추석 당시 진행하려다 무산된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제2순환로 매입땀 통행료 획기적 절감”

노경수 교수 창조포럼 주최 세미나서 주장

맥쿼리로부터 제2순환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광주시가 매입한다면 통행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27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창조포럼 주최 ‘집중해부-제2순환도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노 교수는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서 “맥쿼리에 내려진 감독명령에 따라 자본구조가 6%에서 30%로 원상회복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비용 감소분이 보전된다”며 “광주시가 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매입

한다면, 이같은 보전된 비용 등을 토대로 통행료의 획기적 절감이 확실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또 “민간 자본투자유치는 필요하고,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불평등한 계약이나 비상식적인 이익 추구는 철저히 감시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는 국내 최대 로펌과 대다수 법조인들이 ‘당사자간 계약이라 바꿀 수 없다’는 통념과 법리를 광주시가 깨뜨렸다

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이라든지, 당초 통행료를 잘못 예측한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표를 원용한 결과여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경설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본구조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공익처분 등과 같은 행정행위를 계기로 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광주시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열세를 아끼고 시민들의 통행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대통령 “공직자 적절치 못한 발언 유감”

玄부총리 겨냥...“재발시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심자 화를 맞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

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일간 2박3일씩 1·2차로 나눠 진행할 듯

이산상봉 절차 어떻게

정부가 2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17~22일 금강산에서 열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이달 29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하면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최종 합의될 경우 실제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시기가 언제가 되면 상봉 행사는 총 6일간 2박3일씩 1·2차로 나눠 금강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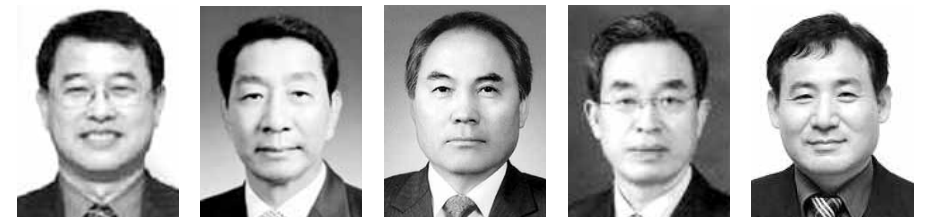
지난해 9월 상봉이 확정된 남북 이산가족 96명이 북한에 사는 가족을 1차로 먼저 만나고, 이어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2차로 남한에 사는 가족과 상봉하

게 된다.

다만, 이산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최종 상봉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향후 상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봉의사와 건강 문제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1·2차 상봉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각각 상봉 전날 강원도 속초 속소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오전 8시30분 속초를 출발,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전의 상봉 사례들을 볼 때 상봉 첫날에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하게 되며 이튿날에는 개별상봉, 공동종식, 야외상봉, 개별식사, 마지막 날에는 개별종식, 작별상봉, 개별종식을 한 후 오후 1시경 귀환하게 된다./연합뉴스



이연 실장, 차영규 국장, 이병렬 원장, 김상호 본부장, 송영한 본부장

광주시 4급이상 63명 승진·전보 인사

광주시는 27일 3급 15명을 포함해 4급 이상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8면)

국장급인 3급 문화관광정책실장에는 이연 시민협력관, 교통건설국장엔 차영규 경기시설과장이 각각 승진·전보됐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는 이병렬 서구 부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에는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는 송영한 하계U대회조직위 홍보마케팅본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서구 부구청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박

항씨, 남구 부구청장에는 안치환 광주비엔날레재단 사무처장이 각각 전보됐다.

준국장급인 4급 문화수도정책관에는 주남식 U대회지원과장, 시민협력관에는 김집중 교통정책과장, 경제산업정책관에는 박영석 건강정책과장, 투자유치지원관에는 박홍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에는 임영을 총무과장,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에는 한하민 교통안전과장, 동구 부구청장에는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경매"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 최 선규 드림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번지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